

Vol. 12

2023.12. 15.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48

F. 02-2017-2199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 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 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 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보경 전임 bgpark@hjcustoms.co.kr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입안 예고
- III. 조세심판사례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작황 부진 등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식품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을 닭고기의 경우 60,000톤에서 90,000톤으로, 망고의 경우 1,000톤에서 2,300톤으로 확대하고, 대파, 바나나, 버터, 치즈 등 총 8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2023년11월17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 각각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본문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부터 별표15까지와 같다.
[별표6]	0207.12, 0207.14, 1602, 1602.3 및 1602.32의 한계수량 "60,000톤"을 "90,000톤"으로 한다.
[별표13]	0804.50의 한계수량 "1,000톤"을 "2,300톤"으로 한다.
[별표15]	별표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조	1) 별표6 및 별표13의 개정규정은 2023.11.17 부터 2023.12.31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 되, 2023.11.17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 하여 적용한다. 2) 별표15의 개정규정은 2023.11.17 부터 2023.12.31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3) 시행일

'23.11.17.

I. 법령 개정사항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탄력세율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법 제1조 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3) 시행일

'23.11.01.

I. 법령 개정사항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탄력세율 (제3조의2 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으로 한다. 2. 제3조 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3) 시행일

'23.11.01.

I. 법령 개정사항

4.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우수 보세공장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대폭 확대하고, 물류 공급망간 신속한 물품의 이동을 보장하여 물류비 등 절감 지원하고, 특허요건, 특허기간,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허절차 개선을 통해 보세공장 신규 특허 진입장벽 완화 및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며, 이를 통해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 및 보세공장 운영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 확대 (제36조 및 제37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세공장 원재료 외 특허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자유로운 반입·반출을 허용하여 반출입 물품에 대한 제한 규제 폐지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수출견품을 장외작업장, 장외장치장 등에서 무상수출하는 경우도 보세운송절차 생략(등록된 보세운송차량 외에 특송 차량 등 일반차량 이용 신속 수출 지원) 3) 장외작업 시 사전 허가신청, 작업결과 완료보고 등 세관절차 생략, 매분기 반출입내역을 사후 제출 4)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한 특례사항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특례적용 중지,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등 조치 신설
보세공장 특허기준 및 절차 개선 (제5조, 제6조의 2, 제9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장비 요건에서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해당 공장에서 구비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외하도록 특허요건 완화 2)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외부위원 임기, 위원회 회피사유 및 해촉사유 등을 규정하여 특허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3) 특허신청 면적 중 일부 임차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 갱신 계약서를 임차기간 만료 전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장 특허기간(최대 10년) 부여

구분	내용
<p>물품 반출입 원활화 및 보세공장의 물류기능 강화 (제7조, 제13조, 제17조~18조, 제30조, 제33조, 제44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공장 ↔ 복합물류보세창고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제조업, 복합물류업) 간 화물관리번호 없이 물품단위 반출입 허용 2) 동일법인 간 또는 반출입이 빈번한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자동수리 특례 적용대상에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 3) 물품단위로 반입되는 경우와 사용신고수리물품이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여 반입되는 경우에 반입신고를 사용신고에 같음 4) 시설재 등 수입통관 대상 물품의 보세공장 내 장치기간 확대(1년 → 특허기간) 및 물품 반입 후 30일 내 수입신고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폐지(주의 처분 → 면제) 5) 보세공장의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을 해당 보세공장의 물품 뿐만 아니라 동일법인 보세공장의 물품까지 허용 6) 잉여물품을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시 잉여물품확인서 제출 의무를 즉시 제출에서 물품 반출 후 10일 이내 제출로 완화
<p>기타 보세공장 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정비 (제4조, 제22조, 제4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에서도 수리, 조립, 분해, 검사, 포장 등의 보세작업이 허용되고, 특허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화 2) 장외작업장 간 또는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간 연속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장외작업 포괄허가 대상임을 명확화 3) 제조, 가공품목(작업종류) 등 보세공장의 업무내용 변경 절차와 법인 등기사항의 변경 통보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

(3) 시행일

'23.11.03.

II. 입안예고

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1) 입안 이유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공급부족 우려 및 서민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닭고기는 60,000톤에서 90,000톤으로, 망고는 1,000톤에서 2,300톤으로 확대하며, 대파 2,000톤, 바나나 30,000톤, 자몽 2,000톤, 자몽 농축액 1,000톤, 분유 5,000톤, 버터 2,000톤, 치즈 40,000톤 및 코코아는 수입 전량에 대해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본문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와 같다.
[별표6]	0207.12, 0207.14, 1602, 1602.3 및 1602.32의 한계수량 "60,000톤"을 "90,000톤"으로 한다.
[별표13]	0804.50의 한계수량 "1,000톤"을 "2,300톤"으로 한다.
[별표15]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조	3) 별표6 및 별표13의 개정규정은 2023.11.17 부터 2023.12.31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2023.11.17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4) 별표15의 개정규정은 2023.11.17 부터 2023.12.31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3) 시행일

'23. 11. 17

II. 입안예고

2.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

(1) 입안 이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14개 물품 중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옥수수 등 64개의 물품은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탄산리튬 등 12개의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6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할당관세 적용 기간 연장 및 적용 대상 품목 추가 (별표1~별표4 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경쟁력 강화,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초원자재, 신산업 관련 설비 원자재 중심으로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12월31일로 적용이 만료되거나 진행중인 114개 품목 중 사료용 옥수수 등 64개 품목은 적용기간을 연장 - 탄산리튬 등 12개 물품은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6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2)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닭고기에 대하여 2024년 3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매니옥침과 설탕은 '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0% 및 '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10%,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천연가스(LNG),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11개 품목은 '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료용 옥수수 등 62개 물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3) 시행일

'24. 01. 01

II. 입안예고

3. 「관세법 제 69 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

(1) 입안 이유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2023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2024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별표 신설)	찐쌀,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대해 기존 조정관세율을 적용

(3) 시행일

'24. 01. 01

II. 입안예고

4. 「관세법 제 68 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입안 이유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최근 3년간의 평
균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발동물량을
조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 과하는 경우 (별표1)	1) 현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계속 부과 2)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미곡류 16 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위한 기준발 동물량을 조정

(3) 시행일

'24. 01. 01

II. 입안예고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1) 입안 이유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포장 김치, 첫갈류 등 미가공식료품과 커피, 코코아두 등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37조 1항)	제37조제1항 중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를 “분류표(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로 한다.

(3) 시행일

'24. 01. 01

II. 입안예고

6.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 중 체납기준 명확화 및 관련 고시 변경 등에 따른 용어의 현행화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 중 체납관련 예외사유 인정범위 확대 (제3조제2항)	(현행) 체납세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 (개정) 체납세액 300만원 미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납부하는 경우 추가	
신용담보 관련 고시 변경에 따른 용어 현행화(제9조제4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신용담보업체	일괄납부업체
	신용담보한도액	일괄납부한도액
월별 납부 한도액 관리 방식 조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일시적 경영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납부기한 연장 효과 확대를 위하여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세액은 월별납부한도 잔액에 가산	
기타	1) 고시 개정에 따른 서식 현행화 및 변경신고 의무 사전 안내문 추가 (별지 제3호 및 제7호 서식) 2) 용어의 정비(제6조제3항, 제16조제2항, 별지 제6호 서식) : 납세고지 → 납부고지	

(3) 의견수렴기간 (시행 일자)

'23. 12. 21 ('23. 0 월 중)

II. 입안예고

7.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 시 업체 기본정보를 추가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 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에 업체 기본정보 추가

(3) 의견수렴기간 (시행 일자)

'23. 12. 21 ('23. 0 월 중)

Ⅲ. 조세심판사례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에게 상표 사용·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주)AAA 이 체결한 쟁점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쟁점상표의 물품 판매를 위해 쟁점수출자와 AAA 가 각각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쟁점수출자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쟁점상표의 사용과 쟁점상표가 부착된 BBB 상품을 판매할 권리를 하여 받고, 이를 대가로 쟁점수출자에게 분기별로 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 28 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쟁점로열티 금액을 잠정적으로 신고하였다가, 확정된 쟁점로열티의 금액을 가산(수정)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라. 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로열티가 업무와 무관한 상표권사용료이므로 「법인세법」 제 27 조에 따라 손금 불산입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위 국세청의 부과처분을 근거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란면서 쟁점로열티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는 쟁점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투자계약상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의 지급 없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 3 자로부터 수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3) 결정일

2023.09.22. (조심 2022 관 0142)

Ⅲ. 조세심판사례

2. 쟁점물품(사운드 바)을 ‘기타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로 보아 HSK 제 8519.81-2900 호와 ‘인클로저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가 분류되는 HSK 제 8518.22-0000 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USB 로부터 음성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쟁점물품을 기타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기기로 보아 HSK 제 8519.81-2900 호(협정관세율 0%~4.8%)로 수입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에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HSK 제 8518.22-0000 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되는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율점검이 필요하다고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각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 8518 호로 변경하여 관련 세액 및 가산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각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제 8519 호의 음성 재생기기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각 처분청에 쟁점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각 처분청은 이를 각각 불승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쟁점물품은 외부의 여러 음원소스로부터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DSP 를 거쳐 사용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는 기기로 그 주된 기능은 확성기로 보임.

(3) 결정일

2023.09.27. (조심 2022 관 0092)

Ⅲ. 조세심판사례

3.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LNG) 중 운송선박의 정박 중 연료로 사용된 버닝가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된 물량이 아니므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LNG 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고, 입항전수입신고 수리 후 쟁점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여 LNG 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쟁점선박의 가동을 위해 쟁점물품 중의 일부인 버닝가스를 가스버닝(연료로 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FOB 조건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버닝가스금액 상당액을 운송관련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DES 조건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버닝가스금액을 별도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종량세인 개별소비세는 공인감정기관의 검정보고서상 순하역량(순반입량)에 버닝가스 물량을 추가한 물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버닝가스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반입된 것이 아니므로 버닝가스 물량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면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쟁점물품과 관련한 운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데 버닝가스는 선박의 정박 중 사용할 연료를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쟁점물품 일부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버닝가스 금액을 포함한 쟁점물품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개별소비세 부과시 버닝가스가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3) 결정일

2023.10.18. (조심 2022 관 0118)

Ⅲ. 조세심판사례

4.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결과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① 및 쟁점수출자②로부터 아세롤라 추출물 분말 제품을 HSK 제 2009.89-1090 호 등으로 수입하면서 협정세율을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관한 원산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FTA 관세법 제 17 조 제 1 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로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정확성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수출자를 상대로 쟁점물품에 대해 국제 간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가산세 부과면제를 신청하였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 가산세 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출자 역시 청구법인의 질의에 계속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하는 등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결정일

2023.09.27. (조심 2022 관 0157)

Ⅲ. 조세심판사례

5. 쟁점물품(TABLE FAN)을 테이블용 · 바닥용 · 벽용 · 천장용 · 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 8415.51-9000 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 8414.59-9000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① TABLE FAN 을 수입하면서 HSK 제 8414.51-9000 호로 품목분류하고,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①의 품목번호가 HSK 제 8414.59-9000 호(기본 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보정 및 수정신고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①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①이 HSK 제 8414.59-9000 호에 분류된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①이 HSK 제 8414.51-9000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② TABLE FAN 을 수입하면서 HSK 제 8414.59-9000 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②가 HSK 제 8414.51-9000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10.13. 처분청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쟁점물품은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와 하단고리 또는 삼각대 소켓을 활용하여 탁상용 뿐만 아니라 실내·외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된 것으로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결정일

2023.10.18. (조심 2023 관 0022)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국제 통상연대 강화를 위한 경제동반자협정(EPA) 본격 추진

-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시작 선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은 지난 9월 우리나라의 첫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이 국회에 보고된 이후 한 달여 만인 11. 2.(목) 서울에서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공식 협상 시작을 선언하였다.

아시아-유럽을 잇는 교역 중심지인 조지아는 총 46개국과 14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넓은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카서스 지역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교통·물류 거점으로, 산업·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조지아는 주요 석유·가스 수송로가 지나가는 에너지 회랑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고, 유럽연합(EU), 걸프협력회의(GCC), 독립국가연합(CIS) 등 인접 경제권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잠재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조지아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공급망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협상 시작 선언과 연계하여 광물, 에너지, 공급망 등 양국 협력 유망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사업(비즈니스) 간담회를 병행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다레이슈빌리(Nadareishvili)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투자차관은 조지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인센티브) 등 투자유치정책과 대외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한-조지아 양국은 2024년 1분기 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고, 조속한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식약처, 의료기기 안정 공급 위해 변경 허가 후 6개월간 종전 제품의 제조·수입 허용

- 국제기준에 따른 '생물학적평가 보고서'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 의료기기 변경 허가 신청 시 심사 여부 결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제공 등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11/1- 11/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일 행정예고하고 11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 변경항목에 한해 변경허가 이후에도 변경 전 제품 6개월간 제조·수입 허용(75번)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심사 대상 판단기준 제공(76번)이다.

종전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변경허가 전'의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품결함이나 안전성 정보, 국내·외 정부 기관의 조치에 따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료기기 자체는 변하지 않는 모델명 변경 ▲사용기간 변경 ▲멸균 방법 변경 등의 경우에 변경허가 후 6개월간 변경허가 전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허가 심사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양·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성능 등 항목별 판단기준을 마련해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를 위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최신 국제기준(ISO 10993-1:2018)에 따른 생물학적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우선으로 의료기기 허가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제 조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대체식품 표시항목, 세부기준 제시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대체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
- 다양한 대체식품 표시가 가능해져 미래 먹거리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 대체식품 :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식품유형의 명칭(예: 소시지, 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예: MEAT FREE 등)하는 표시·광고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그간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식품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를 운영해 대체식품의 표시 기준·방법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대체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3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4. 식약처,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문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추가
- 확인된 제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반입차단 조치
-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여부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사이트'에 사전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된 '테오브로민(Theobrom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테오브로민(Theobromine)'은 기관지 또는 폐에 존재하는 미주신경의 작용을 억제하여 기침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어지러움, 구역, 두통,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테오브로민(Theobromine)' 사용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테오브로민 포함 총 284종).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3,408개, '23.11.28.기준)하고 있으니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